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 4쪽이 모두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위하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모의평가를 모두 푸신 후, 배포한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것은 앞으로의 모의고사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년 양질의 시험지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함이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당 모의고사를 위해 힘써주신 출제진 및 검토진의 이름은 다음 쪽 표지에 기재하였습니다.
- 해당 문제지는 저자의 창작물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습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용도(판매, 불법 복제 후 도용 등)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와 법	1, 2, 3, 4 쪽
-------------	--------------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출제진 및 검토진

출제진

윤준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검토진

남우현(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경서(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성욱(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천성은(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관점은 동일하지 않는데, 이는 '정치'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와 B는 정치의 의미를 (가) 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A는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 회의와 국회의 법률 입법을 위한 회의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회의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는 관점인 B와 차이를 보인다.

- ① A는 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없다고 본다.
- ② B는 국가의 존재 없이는 정치 현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A는 B와 달리 시민 단체의 대표자 선출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④ (가)에 '사회적 최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그 중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 헌법이 A를 기본 원리로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법률로써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근거가 된다.
- ④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원리이다.

3. 법치주의에 대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갑의 관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면, 법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내용과 관계없이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p>	<p><을의 관점> 입법자는 법 제정 절차에서 해당 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p>
--	---

- ① 갑의 관점은 법의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모든 국가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함께 강조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 의원 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A와, 국가 원수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해당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평상시 행정권을, 국가 원수는 통치권을 담당하는데,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원수는 내각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 수반과 내각에 한하여 불신임권을 가지며, 국가 원수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편,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행정부 수반의 임명은 국가 원수가 담당하는데, 의회의 행정부 수반 선출은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① ㉠에서 국가 원수의 임기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은 의회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 시 의회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 ③ ㉠은 국가 원수가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 시 행정권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와 동일하다.
- ④ ㉠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B와 동일하다.
- ⑤ ㉠에 따르면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동일할 수 없다.

5.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국무회의의 의장인 A는 ㉢ 특별 사면을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B 중 일부는 이번 사면의 대상 중 일부가 A의 정치적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A의 사면권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대야소 정국의 C의 본회의에서 해당 ㉢ 법률안이 부결되었다. 한편,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담당하는 D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C에서 가결되었다.

- ① A가 ㉢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A가 ㉢을 명하는 권한은 C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B가 제출한 ㉢은 C에 제출된 회기 내에서 다시 의결될 수 없다.
- ④ D의 재판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D의 장(長)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A, B와 달리 D의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A는 B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B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A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선거에 제시하기도 합니다.

- ① A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② B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
- ③ A는 B와 달리 정치 엘리트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 ④ B는 A와 달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 ⑤ A와 B는 모두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은 국가 기관의 권력 분립 형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 정치 참여 제도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보다 더 넓게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지방 자치 단체의 유형은 범위에 따라 ㉢ 광역 자치 단체와 ㉣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되는데, 각 지방 자치 단체에는 집행 기관인 A와 의결 기관인 B가 각각 존재한다.

<보 기>

- ㉠. A가 B에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에 해당한다.
- ㉡.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 B의 모든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에 해당한다.
- ㉢. ㉢ 소속인 A의 행정 사무 집행은 ㉢에 소속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소속인 B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다음은 기본권에 관한 수업 자료와 이에 대한 갑~병의 진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수업용 자료>

기본권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제시된 두 힌트를 통해 각 기본권을 파악한 후, 친구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해봅시다.

<힌트 1>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힌트 2>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 A는 재판 청구권을 포함하는 기본권이야.
 을: B와 달리 C는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야.
 병: A와 B는 모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지.

- ① A와 달리 C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② B와 달리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③ C와 달리 B는 본질적 권리로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 ④ 갑, 을, 병의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 ⑤ 을은 B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된 외국인 갑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에 대한 보호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A에 제기하면서, ○○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A에 (가) 을/를 제청 신청하였고, A는 이를 인용하여 (가) 을/를 B에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강제 퇴거 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보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방법 외에도 적정한 보증금의 납부나 감독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줄이면서 입법 목적을 실현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① A는 ○○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B의 결정으로 인하여 갑에 대한 A에서의 재판에서 ○○법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B와 달리 A는 정부가 제소한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관찰권을 가진다.
- ⑤ A와 달리 B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10. 다음 사례에서 을이 승소한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자신이 판매하는 장치가 농산물의 숙성지연과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를 을에게 판매하였다. 을은 해당 장치를 구매하여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였는데, 몇 달 후 자신이 기르는 사과 일부에서 갈변 증상이 발생하자 을은 갑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갑이 제조한 제조물로 나타난 피해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을이 갑이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갑이 해당 장치로 발생하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을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 ①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③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는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 18세)과 을(여, 18세)은 각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동거하였으나, ㉠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났고 갑은 A를 인지하였으나, 이후 갑은 을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을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다. 그 후 갑은 병과 법률혼 한 후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고, 을은 정과 법률혼 한 후 A보다 먼저 태어난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3년 후, 정은 19세가 된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A가 태어난 시점에서 갑은 민법상 성년자로 간주된 상태이다.
- ② 갑은 ㉠으로 인해 을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
- ③ A가 입양된 시점에서 갑과 A 간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A가 입양된 시점에서 을, 정은 입양한 C에 대하여 친권을 가진다.
- 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A는 갑에게 인지된 적이 있으나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 은/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A와 형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인 B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C 모두 범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B, C는 모두 (가) 의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① (가)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가)는 '행위 시 판례를 신뢰한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③ 경찰관이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폭행한 것은 A에 해당하나 B가 조각되는 사유이다.
- ④ C가 조각되는 사유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가)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⑤ A에 해당하지 않으나 B와 C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에 어긋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을 상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 이후 갑은 수사 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후 갑에 대한 재판이 ㉠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배심원 전원은 갑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갑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갑과 검사는 모두 해당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갑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갑과 검사 모두 상소하지 않아 갑에 대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갑은 긴급 체포되었으나, 갑에 대한 구속은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② ㉠은 갑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다.
- ③ 민법상 성년인 19세 일반 국민은 ㉠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④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을 부과받지는 않으나 신체의 자유가 일정 기간 제한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 ⑤ 갑이 ㉠으로 진행된 1심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을 ㉠으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4.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A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B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차이가 존재한다.

—<보 기>—
 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A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나. B는 같은 연령인 행위자더라도 그 판단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다. A와 달리 B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가 ② 다 ③ 가, 나 ④ 가, 다 ⑤ 가, 나, 다

[15~16]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17세)은 전자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을(41세)에게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자신의 법정 대리인(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병(54세)과 대규모 전자기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을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정(37세)에게 대규모 전자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너무 많은 양의 주문을 받은 정은 자신이 고용한 A(24세)에게 전자기기 포장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A는 실수로 망가진 전자기기를 일부 포장하였다. 이후 배달은 받은 을은 제품의 고장 여부 파악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데, 갑이 받은 전자기기와 병이 받은 전자기기 일부가 망가진 채로 도착하였다. 이에 화가 난 갑과 병은 을의 가게에 동시에 찾아가 을을 폭행하였다. 을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A를 자신의 대리점 앞 골목으로 불러 폭행하였는데, 폭행 도중 을의 대리점에 있던 간판이 떨어져 을과 A 모두 다치게 되었다. 한편, 을은 사고 당시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5. 위의 사례에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아닌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정에게 고용된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④ 정은 갑과 병 모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⑤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6. 위의 사례에 재산 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가.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병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을 폭행하였으므로, 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르. 을의 A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B는 을, A 모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① 가, 다 ② 가, 르 ③ 나, 다
- ④ 가, 나, 르 ⑤ 나, 다, 르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A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 이에 대해 갑은 자신이 노동조합의 장(長)임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을은 회사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갑의 업무 태만에 한정한 이유로 행해짐이 인정되나, 을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를 명령하였다. 이에 불복한 A 회사와 갑, 을은 모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에 불복하여 A 회사와 을은 행정 법원에 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고, 이후 해당 재판은 확정되었다. 그 후, 을의 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A 회사는 을이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한 점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① 갑을 대상으로 한 A 회사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와 행정 법원의 판단은 동일할 것이다.
- ② 행정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갑은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기한 ①은 해고의 효력이 없음을 다투는 소이다.
- ④ 을은 ①을 제기한 시점에서야 A 회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을은 A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다음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에서 작성된 글이다. 다음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사회에서는 체제의 구조가 우의, 신뢰, 존중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지구적 정부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 <서술형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이 긍정하는 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총 2점)
- <서술형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이 받는 비판 내용을 1가지만 쓰시오. (총 1점)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문항	답안	채점 결과
<서술형 1>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가)	1점
<서술형 2>	(나)	1점

* 각 답안 내용별로 채점하고, 답안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 ① (가)에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에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나)에 ‘복잡하고 다변화된 국제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⑤ 갑의 관점은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이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국제 관습법, 조약 중 하나임.)

A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일정한 행위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 한편, B는 다수의 국제법 주체들이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 사회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B는 성문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① B를 A로 성문화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도 한다.

- ① A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 ② B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③ A와 B는 모두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이다.
- ④ (가)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①을 거친 A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B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갑국은 A를 A₁, A₂, A₃, A₄로, B를 B₁, B₂, B₃, B₄로 나눈 8개의 의회 의원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8인을 선출한다. 또한, 전국을 선거구로 8인의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비례 대표 의원은 봉쇄 조항 없이 의석 배분 기준에 따라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한편,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존재한다. 갑국은 ①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A, B 두 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하여 각 선거구 별로 8인의 의원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하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한편,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며,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 대표는 선출하지 않는다.

<2안> 현재의 지역구 선거구를 2개씩 통합하여 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한다. 정당은 각 선거구별로 2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하며, 비례 대표 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 한편, 갑국 유권자는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의회 의원 선거에 1인 1표를 행사함.

—<보 기>—

- ㄱ. ①으로 ‘개별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 ㄴ. <1안>은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의 비례 대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ㄷ. <2안>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 ㄹ. 현행 비례 대표 선출 방식에 비해 <1안>은 지역 대표성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